

종합·해설

전남도의회 “행담도 후폭풍...J 프로젝트 위축 우려”

“사업 보장시스템 견고히 하라”

정부와 전남도가 아쉽게 추진중인 서남해안 복합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J프로젝트)이 정권 교체나 정치논리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해안 관광벨트를 비롯한 국가 계획에 조기 반영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서남해안 개발사업(S프로젝트)의 시범사업적으로 추진돼온 ‘행담도 개발사업’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 차원의 과학적 지원이 필요한 J프로젝트도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남도의회 정기회(민주·영광1) 의원은 26일 실시될 제205회 임시회

‘송도 신도시’ ‘화원단지’ 실패 거울로 국가계획 조기반영 등 제도적 뒷받침을

도정질문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J프로젝트 사업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문화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정권이나 사람이 바뀌어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전남도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주변 여건이 전남보다 월등한 인천 송도 신도시 개발은 4년째 제자리걸음이고 전북 무주에 아랍자원을 끌어들이며 ‘동양의 에버랜드’를 만들겠다는 호언도 물거품이 됐

다”며 “이는 추진과정이 투명하지 않거나 치밀하지 못했던 탓으로 반변교 사를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20년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해남 간척지 인근 화원관광단지 사업내용이 대부분 중복되므로 J프로젝트 사업지구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적극 대응을 요구하는 주문도 잇따르고 있다. 전종덕(민주·비례) 의원은

“J프로젝트 사업부지 토지경매가가 감정가의 2~3배에 달하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탁우 의원(민주·보성2)은 “편의 예상지역에서 외지인의 보상을 노린 나무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J프로젝트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어서 정치지형 변화에 따른 영향이 적을 것”이라며 “추진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선 정부가 수립 중인 서해안 관광벨트 등 각종 국가계획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한국노총 이남순 前위원장 구속수감

“협약 상당 부분 시인”...권원표 前 부위원장과 공모 추궁

한국노총의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는 25일 배임수재 혐의로 긴급체포된 이남순 전한국노총 위원장을 구속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02년 복지센터 건설 과정에서 전기업체 J사로부터 “벽산건설의 하청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면 공사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권원표 당시 부위원장을 통해 J사가 27억원에 공사를 하청받게 한 대가로 2003년 12월 30일까지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2002년 6월 말에 복지센터 설계 용역을 하청받은 N건축사사무소 대표로부터 설계도면 등의 검수 과정에서 편의를 봐 주고 감리사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영장은 오후 늦게 발부됐다.

서울 남부지법 이태섭 영장전담 부



배임수재 혐의로 긴급체포된 한국노총 이남순 전 위원장이 2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 사실을 상당 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은 영등포구치소 이송 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성원해 주신 노동계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 죄를 받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그는 혐의 인정 여부와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모든 사실을 검찰에서 말하겠다”며 말했다.

또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발전기금을 노동부에 신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검찰이 본인을 이번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한 데 대해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검찰 수사는 한국노총 전·현직 간부의 비리 공모 여부로 확대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단연코 불법행위 한적 없다”

민주·민노 제3당 논란

이광재 의원 검찰 출두 ‘유전 의혹 개입’ 전면 부인

최인기 입당으로 똑같은 10석

유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중앙지검 특수3 부는 25일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철도청(현 철도공사)의 유전 사업에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작년 6월 전대월(구속)씨를 석유전문가 허문석(인도네시아 체류)씨에게 소개해 준 이후 유전 사업에 개입한 적이 있는지, 이의원이 작년 7~9월 에너지 관련 정책자료집 발간을 위해 여러 차례 허씨와 만났을 때 유전사업에 대한 도움 요청을 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유전사업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필요시 이 의원과 전대월, 왕영용, 신광순(구속) 전 철도공사 사장 등 이번 사건 관련자들과 대질신문도 검토하고 있다.

최인기 입당으로 똑같은 10석

최인기 의원의 민주당 입당으로 민주당과 민노당의 의석수가 같아지면 원내 제3당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측은 25일 “국회법상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다수당이 된다는 규정에 따라 민주당이 원내 제3당으로 부상하게 된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국회법 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민주당은 ‘당지지율’을 근거로 민주당은 ‘지역구 의원수’를 기준으로 원내 제3당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이 제3당의 위상을 가지는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민노당 심상정 원내 수석부대표는 “의석 수는 같지만 당 지지율이 크게 앞선다는 점과 민노당은 ‘자연미인’, 민주당은 ‘성형미인’이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하면 원내 지위는 여전히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

/김석영기자 sykim@kwangju.co.kr

광주아울렛 365일 80% SALE. 유명브랜드 365일 80% SALE. 광주아울렛 식·당·임·대. TEL: (062) 384-5100. www.gwangjuoutlet.com

전남도의회(26-27일) 도정질문 주요 내용

전남도의회는 26일과 27일 제205회 임시회를 열고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이번 도정질문에서 의원들은 박준영 지사가 출석한 가운데 J프로젝트 외에도 한전 등 공공기관 유치, 지역혁신특성화사업(RIS) 선정 특혜의혹, 친환경농업 육성 문제점, 고려화 대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한전 등 공공기관 이전=김한중(민주·장성2) 의원은 25일 미리 배포한 질의서에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나후면 전남에는 한전 등 경제유발효과가 큰 공공기관이 와야 한다”며 “최근 도지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열린우리당 내에서 한전을 전북이나 한나라당 본거지인 경북으로 이전하기 위한 정책수순을 밟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고 물었다.

정기호(민주·영광1) 의원은 “전남에 한전을 제외하고는 어떤 공공기관이 배분되더라도 의미가 없으므로 다른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자존심 구기는 구결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특히 국내 최대의 원전 단지가 있는 영광에 유치해 전남 서북부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혁신특성화사업(RIS) 선정 특혜의혹=전종덕(민주·비례) 의원은 “최근 RIS 선정과정에서 수차례 반복하는 등 잡음과 특혜의혹 논란이 일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공무원들이 부적절한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방방지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탁우(민주·보성2) 의원도 “순위 번복 등으로 도정의 신뢰성이 실추됨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며 향후 지역현안사업 선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박민환(민주·구례2) 의원은 전남도 관계자가 평가시점에 1순위로 선정된 업체의 기술 제휴사인 프랑스 업체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 추궁할 예정이다.

▲친환경농업 육성=정기호 의원은 “전남도의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자체가 너무 막연하다”며 작목별 경쟁우위, 미래농산물 소비패턴, 소비처확보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분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탁우 의원은 2009년까지 5년간 매년 소유했던 2천100여의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친환경상호보험제도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 등에 대해 물을 계획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민주당 일부 당원들이 '민주적 절차에 따른 운영위원장 선임을 요구하기 위해 버스'로 상경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다른 당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민주당 광주시 구별 위원장 선임 마찰

일부 당원 ‘韓대표가 특정인사 밀고있다’ 반발

민주당 광주시 구별 운영위원장(옛 지구당위원장) 선임 문제를 놓고 일부 당원들이 “당지도부가 특정인사를 밀고 있다”며 반발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민주당 당원 100여명은 25일 오전 동구 KT빌딩 앞에서 모여 “한화갑 대표가 사적인 인맥을 이용해 특정인사를 운영위원장에 임명하려고 하는 등 당운영이 비민주적”이라고 주장하며 관공버스를 이용해 상경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다른 당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당의

행태는 지난 몇차례 보궐선거의 작은 승리에 안주하여 방심하고 오만해져 일부 당원들이 ‘당지도부가 특정인사를 밀고 있다’며 반발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물을 운영위원장에 임명할 방침”이라며 “한 대표가 특정인사를 밀고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운영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현재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공시최고. Table with columns for date, applicant, and details of public notice. Includes items like '2005.05.26', '2005.05.27', etc.

위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공시최고기일인 2005. 8. 29. 10:00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만일 이를 게을리하면 권리를 상실하여 증서의 무효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2005년 5월 26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김현철